

간편 사골육수, 나트륨 ‘범벅’… 제품간 최대 13배 차이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 시험·평가 1일 섭취기준치 최대 112.4% 제품도 필수아미노산 함량 최대 4.6배 차이

간편 사골육수 제품의 나트륨 함량이 높고 제품 간 차이도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19일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품질, 표시 적합성을 시험·평가한 결과 이 같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대상 제품은 공공 사골곰탕, 노브랜드 사골육수, 비비고 사골곰탕, 양반 진국 사골곰탕,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 요리하다 사골육수, 청정원 사골곰탕,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 흠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 횡성 축협한우 사골곰탕(제품명 가나다순)이다.

시험에서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을 비교한 결과, 제품간 최대 13.3배 차이가 있었고, 제품 1개를 전부 섭취할 경우 나트륨 함량이 1일 영양성분 기준치 대비 최대 112.4%에 달하는 제품도 있었다.

제품 100g당 나트륨 함량은, 양반 진국 사골곰탕(동원F&B)이 238.29mg(1일 영양성분 기준치 11.9%)으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롯데쇼핑)가 17.89mg(기준치의 0.9%)으로 가장 낮았다.

제품 1개당 나트륨 함량의 경우, 풀무원 요리육수 한우사골(풀무원식품)이 2248mg(기준치의 112.4%)로 가장 높았고, 요리하다 사골육수(롯데쇼핑)가 89.45mg(기준치의 4.5%)으로 가장 낮았다.

곰곰 사골곰탕(씨피엘비), 비비고



대전충남소비자연맹 관계자가 1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시중에 판매 중인 간편 사골육수 10개 제품의 안전성과 품질, 표시 적합성을 시험·평가한 결과를 설명하고 있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10개 제품 모두 미생물과 식품첨가물, 항생제 등은 관련 기준에 적합 또는 불검출돼 안전성은 문제가 없지만, 나트륨 과다 섭취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뉴스

사골곰탕(씨제이제일제당), 양반 진국 사골곰탕(동원F&B), 오뚜기 옛날 사골곰탕(오뚜기) 등 4개 제품의 나트륨 함량은 1일 영양성분 기준치의 절반 수준에 달해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트륨 함량이 높은 제품을 섭취할 경우 섭취량 조절이나 시금치나 미나리 등 나트륨 배출에도 도움을 주는 칼륨이 함유된 식품을 함께 섭취하고, 제품 구매 시 영양성분 표시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하다.

필수아미노산 함량은 제품 간 최대 4.6배 차이가 있었다. 흠플러스 시그니처 한우사골육수(흡플러스)가 1928.80mg으로 필수아미노산 함량이 가장 높았고, 양반 진국 사골곰탕(동원F&B)이 416.10mg으로 가장 낮았다.

가격은 내용량 100g 당 가격으로 환산한 결과, 최대 3.01배 차이가 났다. 비비고 사골곰탕(씨제이제일제당)이 193.3원으로 가장 저렴했고, 횡성축협 한우 사골곰탕(횡성축협육가공장)이 583.3원으로 가장 비쌌다.

이밖에 시험 대상 전체 제품은 즉석조리식품, 식육추출가공품 등 시험 대상 제품 관련 식품유형에 대한 미생물 시험결과, 미생물이 검출되지 않았다. 또 소브산, 안식향산 등 식품첨가물 시험에서도 전 제품에서 미검출 됐다.

대전충남소비자연맹은 “제품마다 나트륨 등 영양성분 함량 차이가 있어 이를 확인하고 제품을 선택하는 등 소비자들의 현명한 선택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세종=한용수 기자 hys@metroseoul.co.kr

전력수요 최저 전망… 발전력 감축 등 추진

정부, 화력·원자력·태양광 등 제어 산업부, ‘전력망 혁신 전담반’ 회의 6월 2일까지 전력수요 감소 대책 기간

올 봄 역대 최저 전력수요가 예상되자, 정부가 전력수급 대응에 나선다. 전기 공급이 수요를 넘치면 화력, 원자력, 태양광 등 모든 전원 발전소 출력 제어에 나설 수도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이호현 에너지정책실장 주재로 ‘전력망 혁신 전담반(TF)’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봄철 전력수급 특별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TF는 오는 4월 셋째 주 전력시장 내 최저 수요가 37.3기가와트(GW)까지 떨어질 것으로 예상하고, 전년보다 1주 일 확대된 3월23일~6월2일까지 72일 간을 전력 수요 감소 대책 기간으로 정했다.

올해 봄 최저 전력 수요는 지난 겨울 최대 수요인 91.6GW의 약 40% 수준으로, 연중 최대·최저 수요 격차는 54G W에 달한다. 원전 1기 발전력이 1GW 수준으로 보면, 원전 54기 발전력에 해



당하는 수준이다.

그간 전력수급 대책은 냉·난방 수요가 증가하는 동·하계 전력 부족 대응 중심이었으나, 최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급증에 따라 봄·가을 전력 과잉 대응이 현안으로 대두했다. 이에 정부는 작년 봄·가을 전력수급 대책을 마련해 시행하고 있다.

날씨에 따라 발전력 차이가 큰 태양광 설비의 경우 2013년 1.0GW에서 2023년 28.9GW로 증가했다. 태양광 발전은 기상여건에 따라 발전량이 크

게 변동하며, 발전량 예측이 어려워 전기공급 불확실성을 증가시킨다.

특히, 전력 수요가 연중 최저인 봄철 태양광 이용률은 최고로 높아지면서 전력계통 운영 난이도가 높아진 상태다.

우선 발전소 전력 공급을 줄이고 수요는 늘린다. 신고리 1호기, 한빛 1·4호기, 월성 4호기 등 원전 4기 정기 점검을 봄 전력 대책 기간에 맞추고, 석탄 발전 운영 최소화, 공공기관 자가용 태양광 운영 최소화 등 전력 공급을 자연스럽게 줄이고 수요는 늘리는 등 선제적 안정화 조치를 실시한다.

이러한 조치에도 불구하고 계통 불안정성이 심화할 경우, 모든 전력 전원 발전소 출력 제어를 검토·시행키로 했다. 출력 제어가 상대적으로 쉽고 연료 비가 높은 유연성 전원인 석탄과 LNG(액화천연가스) 발전을 먼저 출력제어하고, 그래도 출력제어가 필요한 경우, 원전과 연료전지, 바이오, 태양광, 풍력 등 모든 발전원이 출력제어에 참여토록 할 계획이다.

/세종=한용수 기자

특별방역 등으로 소·돼지고기 물가 잡기

농식품부, 출산물 전년동월比 1.1%↑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으로 안정세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가축전염병 최소화 및 소비자 부담 완화 정책 추진으로 축산물 가격이 올해 3월 기준 전년과 유사한 수준에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통계기에 따르면 2월 축산물 소비자물가가 전월비 1.5% 하락하고, 전년 동월비 1.1% 상승에 그치는 등 상대적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중순 현재 계란의 소비자가격은 6167원(특란 30구), 닭고기는 6016원(생닭 1kg), 돼지고기는 2251원(삼겹살 100g)으로 전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 같은 축산물 가격 안정추세는 지자체, 관계기관, 농가, 계열사 등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지난해 겨울부터 강력하게 추진한 선제적인 가축전염병 방역대책의 효과가 나타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그간 겨울철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와의 확산으로 계란 등 축산물 가

격이 급등하는 사례가 빈번했으나 올해는 최근 15년간(2008년 이후) 가장 작은 규모로 살쳐분(361만 수)을 실시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했다는 게 농식품부의 설명이다.

정부는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2월까지 특별방역기간으로 설정해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에 대비한 위험시·군별(68개) 전략지도를 마련하여 추진했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뿐 아니라 아프리카돼지열병(ASF), 구제역, 럼피스킨 등의 주요 가축전염병의 발생도 크게 줄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 1분기 예만 7건 발생했으나, 올해 1월 2건 발생 이후 추가 발생이 없으며, 지난해 축산물 공급 불안 요소였던 구제역(2023년 11건)과 럼피스킨(2023년 107건)도 올해 추가 발생이 없는 상황이다.

또 “축산물 수급 안정 및 소비자 부담 경감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해 왔다”고 밝혔다.

/세종=김연세 기자 kys@

국내 기업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 지원

탄소배출량 산정 지침 공동 개발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이 한국회계기준과 기업의 지속가능성 공시 이행을 지원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체결한다고 19일 밝혔다.

이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지속가능성 공시에서 핵심이 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는 지침을 공동으로 개발하고, 기업이 지속가능성 공시를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교육을 제공하게 된다. 협약식은 20일 서울 은평구 한국환경산업기술원에서 열린다.

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기업이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하도록 제도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며 “해외에서는 주요 지속가능성 공시 기준이 올해 3월6일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최종안 채택으로 모두

확정되면서, 이에 영향을 받는 기업들은 빠르면 2025년부터 지속가능성 정보를 공시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유럽연합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등 국제사회의 탄소 규제가 강화되고 세계적인 기업들의 공급망 탄소화 정책이 추진되면서,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요구가 더욱 높아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양 기관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산정 기준(지에이치지 프로토콜)과 우리나라 온실가스 배출권 거래제가 채택하고 있는 산정 기준의 차이를 최소화한다. 국내외 지속가능성 공시에 활용할 수 있는 산정 지침을 개발할 예정이다. 올해 말까지 실제 적용 사례를 담은 지침 초안을 만들고, 기업 의견을 수렴하여 내년 초에 최종안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기업가정신·소비자교육, 경제교육에 편입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개정

국내 경제교육 체계에 ‘기업가정신 교육’과 ‘소비자 교육’이 추가된다. 정부는 19일 제13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경제교육지원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을 의결했다.

부처 간 협력을 확대하기 위한 목적으로, 국가 경제교육 정책 협의체인 경제교육관리위원회에 기업가정신 교육을 주관하는 중소벤처기업부와 소비자

교육을 주관하는 공정거래위원회를 새로 편입한 것이다.

이에 따라 기획재정부 경제교육 프로그램과 전국 지역경제교육센터, 또는 6월 출범 예정인 디지털경제교육플랫폼 등에서 온·오프라인 연계 교육이 활성화할 전망이다. 경제교육 추진범위와 민간 협력도 확대한다. 경제교육 관련 위탁업무 범위에 ‘경제교육포털 관리·운영’과 ‘경제교육 실태 및 의식 조사’를 명시한다.

/세종=김연세 기자